

오락가락 새누리...이정현 대표 “국감 복귀” 의총서 뒤집어

국정감사 정상화 진통

“명분 없인 못 들어간다”

환영 입장 낸 야권 당혹

정세균 유감 표명 여부 주목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정상화를 놓고 정치권의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새누리당은 내일부터 국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무조건 복귀는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29일 국감 정상화는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도 국정감사 파행을 되돌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정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유감 표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감 파행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틀로코스터 새누리당=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국정감사)에 복귀 안한다. 복귀할 수 없다”고 28일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보이콧 철회를 선언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내일 국감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의 총정은 심본 이해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의총에서 당 대표가 단식하게 내버려두고 국감에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대오를 더 공고히 다진다는 의미에서 정 원내대표를 필두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단식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늦게 다시 의원총회



사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정세균 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발언한 뒤 정진석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열고 국감 거부 등 국회 일정 보이콧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정세균 사퇴 관철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내일부터 새누리당은 국감에 임해달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게 나와 새누리당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성실한 국감을 통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예산은 바로 쓰고 있는지, 국민에게 갑질은 안 하는지 감시하고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3일째 접어든 단식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관철시킬 때까지 단식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의 국감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 보이콧을 지속하기로 한 것은 정세균 국회의

장의 사과를 얻어내면서 정권의 주도권을 쥐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 복귀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제 공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권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당혹스런 야권=이정현 대표의 국감 복귀 요청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던 야권은 새누리당 의총에서 국감 보이콧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야권 일각에서는 정세균 의장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의 불밀 대화가 시작됐지만, 진행 결과를 두고는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3당이 중재안에 합의를 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불밀 협상 상황을 일부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합의가 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설명이 어긋난 것은 정 의장의 유감 표명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철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더민주와, 일단 정 의장의 유감 표명을 통해 국감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 간의 온도차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과 접촉하는 등 정 의장의 사과와 국회 정상화를 연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는 통 크게 일괄 타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과 이정현 대표의 단식 철회,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등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정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현장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사흘째인 28일에도 파행은 계속됐다. 이날은 효율적인 국감 진행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날로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교문위의 교육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감만 각각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기재위는 국감을 진행하지 못했고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교문위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국감을 진행했다.

3당 간사 출구전략 모색...새누리 “국회의장 사퇴” 완강

◇기재위=새누리당 소속인 조경태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 3당 간사는 이날 거듭된 국정감사 파행에 따른 출구전략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두 야당은 조 위원장의 상임위 복귀와 국감 진행을 거듭 촉구했으나 조 위원장과 이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요구와 국감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며 완강하게 맞섰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재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서만 간사들끼리 일치를 봤다”며 “위원장은 서로 잘 (협의)해서 정상

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의견만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민이 많은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서 위원장이 이전 대책을 내릴 때가 됐다. 우리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기재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게 꼭 필요하다. 위원장이 당장 오늘 오후라도 국감장에 와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정 의장 사퇴를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런 문제는 지도부가 논의하더라도 국감은 국감대로 제대로 진행되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최순실씨 딸 대학 입학·학점 취득 특혜 의혹 제기

◇교문위=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권의 ‘비선’으로 지목하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이 대학 입학 과정과 학점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최씨의 딸이 2015년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이후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꾸준히 취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영 교문위원장은 “아주 일리가 있는 요청”이라며 간사 협의를 당부했다.

더민주 김민기 의원은 정부가 사실 여부를 파악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이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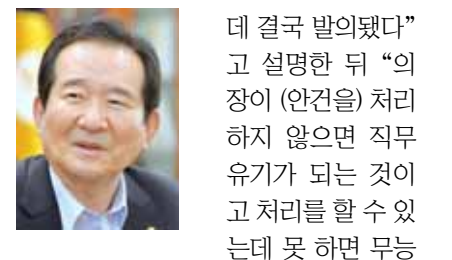
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정인을 위해 학적을 바꾼 거라면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 제출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다.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교과서를 만들면 되겠다. 국회는 역사교과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만들어지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본 제출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경한 정세균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논란에 대해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노력했



데 결국 발의됐다”고 설명한 뒤 “의장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할 얘기가 없다”고 유감 표명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임동욱기자 tuim@

이정현 전격 국감 복귀 선언 왜?

당 지도부와 협의 안해...당 파열음 부담 느낀 듯

'정세균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정 원내대표 등은 “정세균 규탄”을 외치며 한층 강도높은 대야 투쟁을 예고했다. 또 국감 복귀를 선언한 김영우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강경파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상

황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의원 등을 향해 “더 이상 당론과 괴리가 있는 일탈하는 모습은 당 지도부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복귀 선언은 국감 파행의 비판이 고스란히 새누리당으로

전가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의 국감 파행은 결국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정권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 정쟁 현안들을 덮고 넘어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영우 의원이 복귀를 선언하고,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국감을 참석하는 등 당 방침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이 대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가 시작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청탁금지법은 깨끗한 나라, 신뢰의 대한민국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공직자들

- 국가·지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공공 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무수행 사인(私人)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 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떠한 형태의 금품 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최소한의 금액 등은 허용됩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들이 함께하는 식사·다과·주류·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 **선물**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접대문화 NO,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 공직자 등의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민원 등 특정 행위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법한 부정청탁, 금품 수수는 소속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았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